

# 종합 투자계획(안)

2004. 12. 29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 목 차

I. 추진배경 .....	1
II. 추진전략 .....	2
III. 추진상황 .....	3
IV. 2005년 중 주요 투자사업 .....	4
1.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	4
2. 고속도로사업의 조기 추진 .....	12
3. IT 및 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	13
4. 임대주택 활성화 .....	14
5. 공기업 투자 확대 .....	14
6. 민간자본의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	15
V. 2005년 이후 본격화될 주요 투자사업 .....	16
IV. 향후 추진 계획 .....	17

## I. 추진배경

###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성장 유지

- 내년도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매년 40만개 이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 성장이 필요
- 건설경기의 급속한 침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연계적·보완적 대책 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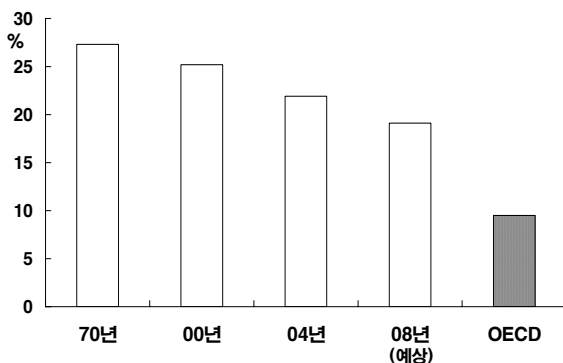
### □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

-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은 증가하고 경제사업은 감소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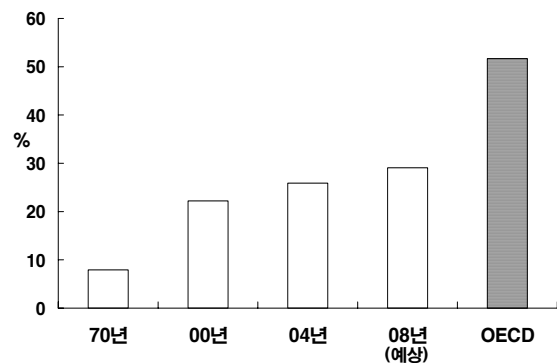
→ 민간자본의 투자를 확대하여 경제사업의 부족분 보충 필요

\* 영국은 사회기반시설의 약 11%를 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중

< 재정 중 경제사업 비중 >



< 복지 및 삶의 질 분야 비중 >



### □ 민간의 아이디어와 효율성을 적극 활용

-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도 높은 품질과 다양성·차별성을 요구

→ 민간주도의 개발을 통해 연중 신규사업 발굴, 사업내용 다양화, 관리·운영 효율화 등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접목할 필요

## II. 추진전략

---

□ 종합투자계획은 모두에게 상생(Win-Win) 효과가 나타나도록 추진

① 청년 실업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

\* 실업자 수(04.11월) : (전체) 77.9만명, (청년실업) 36만명

② 부동산금융화하고 있는 금융자금과 저수익의 연기금 등에게는 매력적이고 안전한 투자처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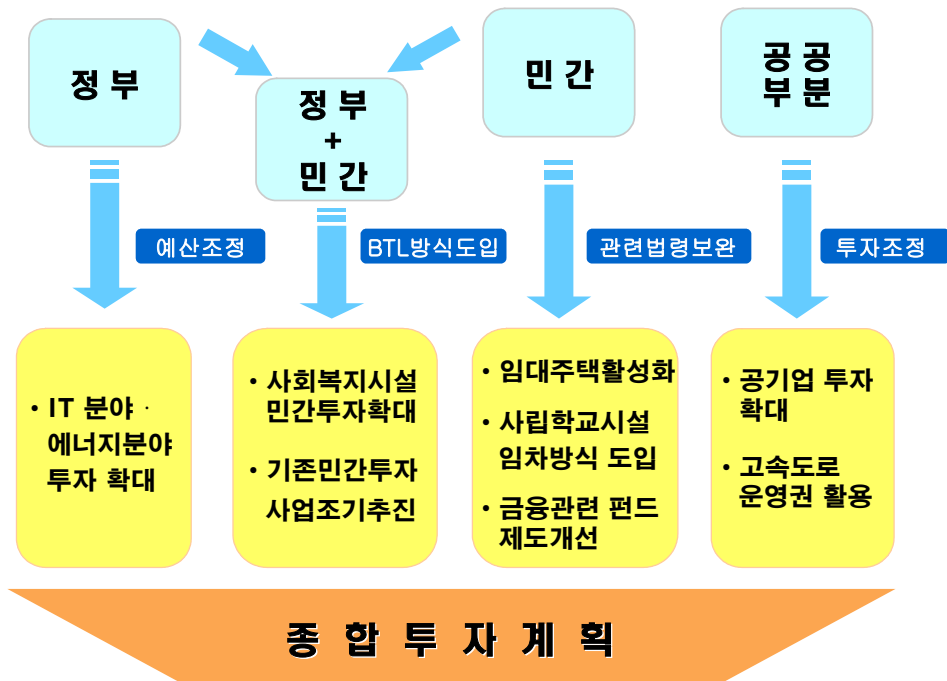
- \* 금융기관 6개월 미만 단기수신(04.11월) : 395.2조원  
상장기업 · 코스닥등록기업 현금보유액(04.6월) : 43.9조원
- \* 연기금 여유자금(04. 6월) : 200.1조원(채권투자비중 53.8%)  
생보사 운용자산(04.10월) : 163.6조원

③ 국민에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국가가 리스를 통해 높은 수준으로 앞당겨 제공

영 · 유아기	보육정보센터 설립 직장보육시설 확충
청소년기	초중교 校舎 · 체육관 신 · 증축 대학 기숙사 확충 공공 도서관 확충
청장년기	임대주택 활성화 박물관 · 문예회관 신축
노년기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 Ⅲ. 추진상황

- 단기적으로는 경제주체별 가용재원을 최대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생산 부문으로 유도
  - ① 정부 투자 확대 : DB, 교통·물류시스템 등 IT 분야와 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 예산 확보 추진중
  - ②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 사회복지시설까지 대상 확대, 새로운 방식(BTL) 도입 → 민간투자법 개정 추진중
  - ③ 민간 투자 활성화 : 사립학교에 대한 임차방식 도입, 금융관련 펀드 활성화 유도 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④ 공공부문 투자 확대 : 고속도로 운영권 활용 등을 통해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추진하고, 공기업 투자 확대 유도



- 중·장기적으로는 기업도시,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 ('기업도시특별법' 04.12.9일 국회 통과)

## IV. 2005년 중 주요 투자사업

---

### 1.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새로운 개념의 민간자본 유치제도를 도입

□ 민간투자가 가능한 시설을 도로·철도 등 기존의 SOC 시설 이외에 기숙사, 도서관 등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 대상사업은 꼭 필요하면서도 재원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 중 내년 중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선정

○ 추가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의 BTO, BOT 방식 외에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추가

\* BTL : 시설을 정부에 임대하고 정부가 지급하는 임대료를 통해 수익을 취하는 방식

□ BTL 방식에 맞추어 사업비, 기간, 수익률 등의 조건을 투입하면 자동적으로 연간지급 리스료를 산정하는 시스템 개발

○ 수익률은 국채금리 +  $\alpha$ 로 하고,  $\alpha$ 는 시장참여자간의 경쟁을 통해 결정

□ 사업시행 절차를 간소화(일괄 타당성 조사실시 등)하여 내년중 투자가 가능하도록 조치

**검토중인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부처별 제안사업)

부 처	주 요 사 업
교육부	초·중등학교 노후교사 증·개축 초·중등학교 체육관 신·증축 국립대 기숙사 시설 확충 부산대학병원 건축 등 8개 사업
환경부	하수관거 신설 및 노후관거 교체 노후수도관 정비 등 4개 사업
복지부	노인의료시설 확충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복지회관 확충 등 3개 사업
문광부	도서관 건축 문화·예술 시설 건축(박물관, 문예회관)
국방부	군 주거시설 내무반 증·개축
노동부	기능대학 시설확충 등 4개 사업
경찰청	경찰서 개축 등 5개 사업
여성부	보육정보센터 등 3개 사업
재경부 등 8개 부처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청사 건설

## 주요 대상사업별 내용

### ① 국·공립학교 시설 확충

- 국립대 기숙사, 초·중등학교 校舎 등 국·공립학교의 시설 확충이 긴급하나, 재정여건으로 인해 투자가 지연

- \* 지방국립대 기숙사의 경우 수용률(현재 11.3%)을 30%로 확대하는 데에 28년이 소요
- \* 30년 이상된 초·중등학교(전체 학교의 17%) 노후 교사를 증·개축하는 데에 20년이 소요

- 민간투자 방식(BTL)을 활용, 국·공립학교 시설을 조기 공급하여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 ② 하수관거 신설 및 노후 관거 교체

- 침수피해 방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대폭적인 하수 관거의 정비가 필요하나, 소요재원이 막대하여 사업이 지체

- \* 하수관거 보급률은 65.8%에 불과하고, 설치된 관거도 8.6m당 1곳 꼴로 불량 발생

- 민간투자 방식(BTL)을 활용, 조속히 정비하여 09년까지 관거 보급률을 선진국 수준(80% 이상)으로 개선

→ 동 사업은 고용 창출효과가 커서 실업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 하수관거(기타 토목)사업의 고용유발계수 : 10억원당 15.3인



### ③ 군인 APT 등 건설

□ 현재 군인아파트의 37%가 시설이 협소하거나 노후화되었으나, 현 예산상황(중기계획)으로 09년에야 개선 완료 전망

□ 민간투자 방식(BTL)을 활용, 당초 계획(05~09년)보다 2년 앞당겨 07년까지 완료 추진

⇒ 05~07년간 군숙소 수요의 70%인 18,000세대 건축

□ 육군통합막사 등 군부대 병영시설 증축사업에 대해서도 일부를 시범적으로 민자유치로 추진

### ④ 공공도서관 시설 확충

□ 공공도서관은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 균등 보장, 평생학습을 위한 정보 습득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이나

○ 재정여건상 투자가 충분하지 못하여 전국적으로 도서관 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노후 시설도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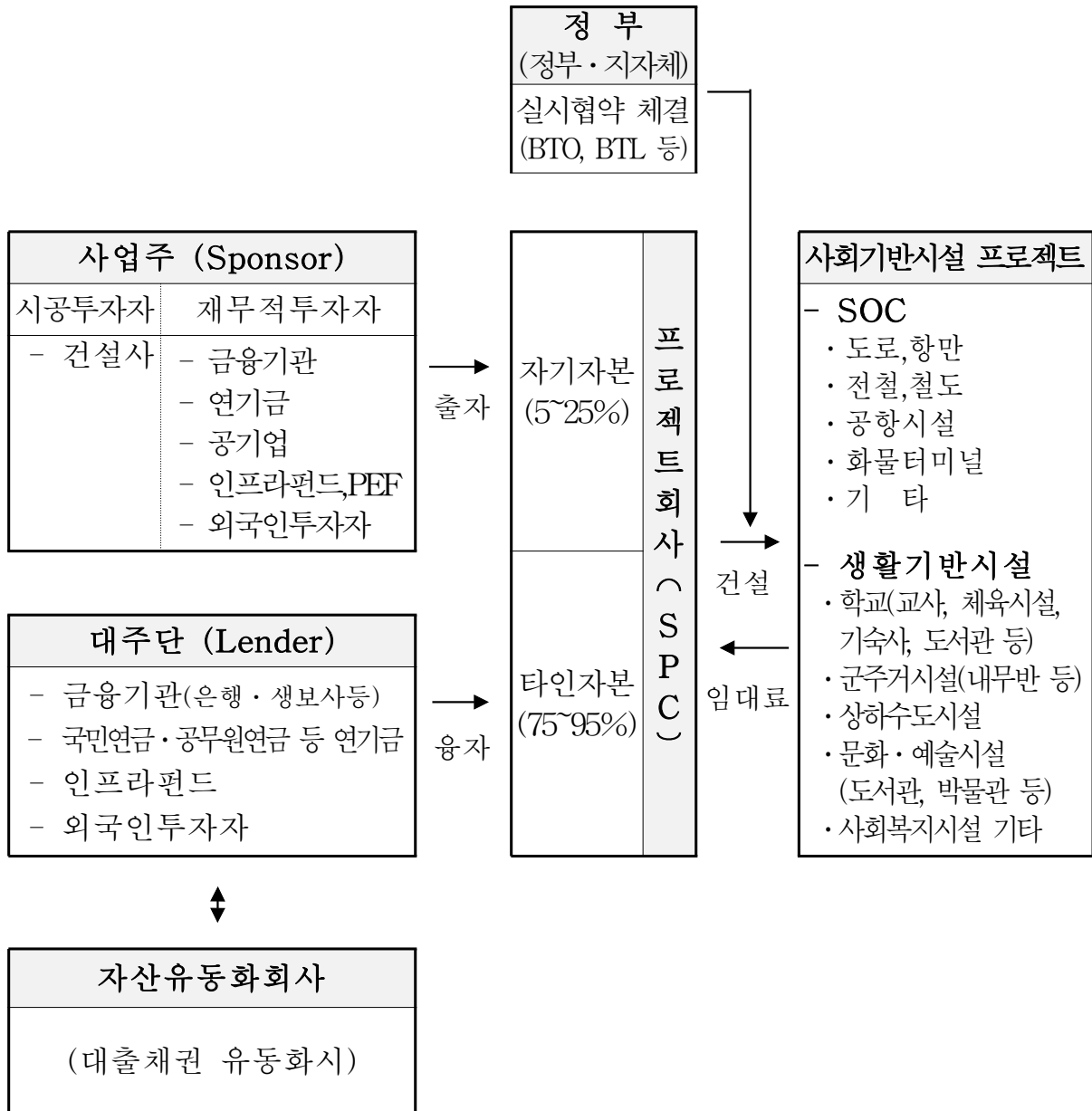
\* 전국의 공공도서관 수('04.12) : 471개관(인구 10만명당 1개관 수준)

□ BTL방식을 활용하여 최신식 공공도서관(예 : 과천도서관) 시설을 조기에 공급할 필요

\* 공공도서관 건립 수요 : 총 232관(신축 173, 재건축 59)

## 추진 구조

- ① 정부는 대상 사업(사회기반시설)과 사업모델을 제시
- ② 민간은 프로젝트회사(SPC)를 설립하고, 출자 또는 용자를 통해 공공시설을 건설
- ③ 정부(지자체)는 민간이 건설한 공공시설을 장기간 임차 사용



## ① 민자역사

- 민간투자자가 역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복합된 민자역사를 건설
  - 역무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가 소유하고, 상업시설은 30년 점용 허가 후 국가가 소유
    - \* 점용기간 동안 상업시설 수익에 비례하여 점용료 지급
- 현재 9개 역사(영등포, 서울 등)가 완공·운영중

## ② 사립대학교 기숙사(건국대)

- 민간투자자가 대학내에 기숙사를 신축하여 기부채납 후 15년간 운영(대학은 연간 일정비율 만실 보장)
  - 민간의 역할 : (건설단계) 개발 기획, 설계, 건설, 자금 조달  
(운영단계) 시설 유지보수, 청소, 경비 등 업무

<사업 개요> 총투자비 : 470억원  
 공사기간 : 05.2 ~ 06.8(18개월)  
 투자비 회수 : 기숙사비(97%) + 부대시설 임대료(3%)

## ③ 민영교도소 도입

- 민간이 자기부담으로 교도소 부지 확보·건물 신축 후 국가로부터 수용자를 위탁받아 운영(운영경비는 예산으로 지급)
- 01.7월 법적 근거('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를 마련한 후 02.3월 첫 민영교도소 설치 계약 체결 → 05년 완공 예정

<계약내용> 수탁기관 : (재)아가페, 계약기간 : 12년  
 위치 : 경기도 여주군(부지 6만4천평, 5~600명 규모)  
 정부지원 : 매년 운영비 45~50억원(정부 예산의 90% 수준)

## ① 영국의 민자사업

- 영국은 90년대 초반 민자사업제도(PFI : Private Finance Initiative)를 도입
  - '03년 현재 사회기반시설의 약 11%를 PFI 방식으로 추진중
  - 총 451개의 PFI 사업이 완공되어 운영 중이며, 교육·보건 시설, 청사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발
- 영국의 PFI 사업은 공기 준수율·사업비 준수율 등에서 재정사업에 비해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
  - \* 총사업비 준수율 : (PFI 사업) 88% vs (재정사업) 27%
  - 공기 준수율 : (PFI 사업) 86% vs (재정사업) 30%

## &lt; 사례 : Hattersley 학교 &gt;

- 대상사업 : 초등학교 2개 개축 + 중학교 1개 신축
- 총투자비 : 380억원 (\* 건설 : 98~02년)    ○ 운영기간 : 30년
- 민간의 역할 : (건설단계) 설계, 건설, 자금조달  
(운영단계) 시설 유지보수, 청소, 급식, 경비 등
- 사업시행자 : Pyramid Schools Ltd.
  - \* 건설사+시설운영사+은행이 출자, 민간투자비의 90%를 은행이 대출
- 정부지급액 : 시설임대료 + 운영비용보조금
  - \* 시설임대료 : 민간투자비에 대한 수익률을 반영한 30년 분할 상환금
  - \* 운영비용보조금 : 협약에서 정한 성과수준과 실적 운영서비스 수준에 연동하여 지급 →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민간의 동기 부여
- 부대사업 운영권 부여 : 체육관시설 등

## ② 일본의 민자사업

- 일본은 '99년 영국의 PFI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03년 민간투자 규모는 896억 엔(약 9,000억원)

\* 전체 175개 사업 중 교육문화시설(58개), 폐기물 처리시설(35개)의 비중이 높음

### < 사례 : 이치가와(市川)시 제7중학교 >

- 대상사업 : 제7중학교, 문화센터, 보육소, 노인요양시설(Care House), 재가노인복지시설(Day Care Center) 등 복합시설\*

\* 학교시설은 용적률이 낮아 여유 용적에 해당하는 공간에 각 기반시설들을 입체적으로 건설하여 市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부담 절감

- 총투자비 : 360억원 (\* 건설 : 98~02년)      ○ 운영기간 : 15년

- 민간의 역할 : 건설, 유지관리, 운영 담당

\* 다만, 제7중학교, 문화센터, 보육소는 市에서 운영

- 사업시행자 : (주)市川七中行徳후레아이施設

## ③ 민영 교도소

- 미국의 경우 1984년 테네시 주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01년말 현재 총 9.2만명 수용 중 (전체 수용자의 6.5%)

- 수입은 ① 정부 지급액(대부분), ② 재소자의 노임이며, 계약직 사용, 전자감시체계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

- 브라질의 경우 종교적 교화목적의 비영리 방식으로 민영 교도소를 운영('휴마이타 모델')

- 주 수입원은 민간기부이며, 재소자 노임 중 일부를 기부 받아 운영비용에 충당하고, 자치 운영제도를 통해 비용 절감

※ 영국, 호주, 캐나다, 남아공, 스코틀랜드, 뉴질랜드도 운영중

## 2. 고속도로사업의 조기 추진

### ① 고속도로 운영권 활용

- 고속도로 운영권을 활용, 장기투자자금을 조달하여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
  - 재원조달 방법 : 유료도로관리권을 기초로 5~20년 만기 ABS를 발행하고, 이를 금융기관, 연기금 등에서 인수
  - 재원조달 규모 : 향후 6년간('05~'10) 5조원 수준
    - 조달한 재원은 전액(매년 0.6~1조원) 고속도로 건설에 투자  
→ 21개 노선의 공기를 평균 2년 단축
  - 대상 노선 : 투자비 회수잔액, 통행료 수입 등을 고려하여 수익성이 높은 영동선·서울외곽선 등을 선정(잠정)

### ② 고속도로 사업의 민자사업 전환 추진

- 현재 추진중인 3개 고속도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부산~울산, 여주~양평,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 05년 상반기 중 실시협약을 체결

### ③ 민간제안 도로사업 조기 추진

- 민간이 제안한 사업(13개) 중 노선간의 경쟁을 통하여 우선추진 사업을 결정,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추진
  - 우선추진 사업을 당초 2~3개에서 5~6개로 확대
  - 05.2월경 제3자제안공고(120일)를 시행하고, 7월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추진

### 3. IT 및 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 ◇ 미래의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해 IT 및 에너지분야에 대한 투자를 최대한 확대  
 ⇒ 재정을 최대한 확보하고,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 < IT 분야 >

-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집중투자가 필요하며, 특히, DB사업은 청년 일자리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단위 : 억원)

사 업 명	05년 예산(정부 추진안)
1. DB 구축	1,495
- 행정 DB	1,225
- 지식 DB	270
2.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700
3. 교통·물류시스템 개선	1,780
- ITS 인프라 구축	1,100
- 도시 간선도로 교통정보기반	600
- ITS 표준화 및 통합 DB구축	80
4.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258
소 계	4,233

#### < 에너지 분야 >

- 고유가, 기후변화협약 발효 등에 대비하여 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 유도

(단위 : 억원)

사 업 명	05년 예산(정부 추진안)
에너지자원기술개발*	145
에너지절약시설설치(용자)	2,000
신재생 에너지보급(용자)	500
소 계	2,645

\*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배출 감축기술 개발사업'

## 4. 임대주택 활성화

### ①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지원

-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방안’(04.11.12)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1/4분기중 법령을 제·개정하도록 독려
- 재무적 투자자(대형 건설사, 연기금·REITs) 참여 유도방안 추가 강구
  -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정책 홍보 및 애로·건의사항 파악
  - 적정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택지공급가 인하, 세제지원, 미분양 주택의 임대사업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② 국민임대주택 10만호의 차질 없는 건설

- 소요택지 1,000만평(수도권 500만평) 중 미확보된 택지 325만평을 차질없이 확보(1/4분기중 지구 지정)
-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주택건설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
- 지자체 주거복지평가 등을 통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 5. 공기업 투자 확대

- 05년도 공기업의 투자를 최대한으로 확대 추진

\* 공기업투자(조원) : (03계획) 17.3 → (04계획) 18.9

- 04년의 실제 투자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25.4조원)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 04년 수준 이상으로 투자 확대 유도



## 6. 민간자본의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 ① 사립학교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확대

#### □ 임차방식의 민간투자 허용

- 현행 법령\*상으로는 사학재단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임차방식으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불가능

\* 校舎·校地는 학교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안에 타인 소유 건축물을 둘 수 없음(「대학설립·운영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일정기간 임차하는 방식의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추진(05.1)

#### □ 사립 초·중등학교의 노후 교사 증·개축 지원 강화

- 사립학교의 경우 시설물 소유권이 정부에 이전되지 않으므로 노후 교사 증·개축시 민간투자법의 적용이 불가능

\* 사립 초·중교 노후교사 증·개축 규모 : '05~'07년간 약 1조3천억원  
→ 현 지원방식에 의할 경우 목표달성에 20년 소요

⇒ 노후 교사 증·개축이 조기에 가능하도록 민간투자법상 BTL과 유사한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 강구

### ② 금융자본의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등의 제·개정을 통해 투자대상 확대·다양화

- 투자대상 확대 : 유가증권 등 → 부동산 등 실물자산, 장외파생상품
- 방식·대상 다양화 : 사모투자펀드(PEF), 명목회사형 REITs, 선박투자회사 등 도입

## V. 2005년 이후 본격화될 주요 투자사업

◇ 05년 이후에는 기업도시·신도시 건설 등의 대형 프로젝트가 건설투자를 뒷받침

### ① 기업도시 건설 추진

□ ‘기업도시특별법’ 국회 통과(04.12.9)에 따라 제도적 기반 마련

○ 기업이 주도적으로 산업·주거·레저 등의 기능이 복합된 자족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 \* ① 원활한 도시개발을 위해 토지수용·출자총액제한·조세감면 등 특례 부여
- ② 자족적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병원·체육시설 설치상 특례 부여

□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발굴·지원

○ 시범사업은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도시유형(산업교역, 지식기반, 관광레저, 혁신거점)별로 균형있게 2~4개 선정

- 05.1월중 시범사업 신청 → 05년 하반기 구역 지정

### ② 강북재개발 및 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가속화

□ 강북 재개발

- 1차 3개 지구(은평·길음·왕십리) : 단지조성·건축공사 본격 시행
- 2차 12개 지구(한남·아현·전농 등) : 05.3까지 개발기본계획 확정

□ 신도시 개발 공사 본격 추진

- 판교, 아산, 파주 : 05년내 착공 및 주택분양 시작
- 김포, 수원 : 05년내 개발계획 승인
- 시화 MTV(Multi-Techno Valley) : 05년내 개발사업 착수

## VI. 향후 추진 계획

---

(\* 민간투자법 국회 통과시)

